

전남도, '전라남특별자치도' 공감대 확산 나선다

국회서 '특별법 제정 세미나' 개최 에너지·관광 등 정부권한 이양 논의 김지사 "선제적 자치권 확보" 강조 연내 특별법 제정 정치권 설득 총력

전남도가 국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국회,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가 주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주철현·박지원 국회의원 등과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제주와 강원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한국의 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

한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함께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선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고향사랑 지정기부' 보완 시급

1면서 계속 이어 "지정기부 단계에서 기부자들에게 초과금액 또는 목표액 미달시 사업의 축소 또는 변경이 발생될 수 있으며, 폐지되는 모금액은 타 기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며 "아직은 시행 반년이 채 되지 않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모금액 미달성으로 사업이 변경될 경우엔 각 지자체 혹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이력 변경 등을 공시할 예

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승근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지정기부제의 경우 해당 기부금을 관련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정기부금의 사용처를 전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는 것은 기부자들에 있어 '만족스러운 기부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지는 만큼 클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모금액과 상관없이 모인 특정 사업에 대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시·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시, 231명 79억·도, 308명 136억 1년 이상 경과·1000만원 이상 체납

광주시와 전남도가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광주시는 이날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이번 2024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멸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유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전남도도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

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136억원 규모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원, 법인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노병하·오지현 기자

전남일보 인스타 @jnilbo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